



주간통일정세 2013-15(2013.04.08 ~ 04.14)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3-15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박봉주, 첫 공개연설…"김정은 영도체계 확립"(4/8, 연합뉴스)**
 - 이달 1일 북한의 내각 총리에 다시 선임된 박봉주가 총리 취임하고 나서 8일 가진 첫 연설에서 "정권건설을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박봉주 총리는 이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0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국방위원회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제때에 어김없이 집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힘.
- **北 "발칸반도 '피의 교훈' 되새겨야'…자위력 강조(4/10, 노동신문)**
 - 북한이 발칸반도 사태를 '피의 교훈'으로 거론하며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전함.
 - 신문은 '발칸반도의 비극적 사태가 보여주는 피의 교훈'이라는 글에서 "발칸전쟁은 미국 주도하의 나토가 이전 유고슬라비아(신유고연방)를 반대해 일으킨 침략전쟁이었다"며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밝힘.
- **'전쟁위협' 北, 노동신문엔 김정은 친필답장 '도배'(4/10, 노동신문)**
 - 연일 전쟁 위협을 이어온 북한이 10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민에게 보낸 친필답장을 대대적으로 소개해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자 1면 머리에 "김정은 원수님께서 각지 근로자와 교직원, 학생, 어린이들이 올린 편지를 보고 친필을 보냈다"라며 10건의 주요 친필답장 사진을 게재하고 1, 2면에 관련 내용을 소개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민들의 편지에 친필답장하고 서명한 날씨는 올해 2월 13일과 27일로 돼 있어, 북한이 친필답장을 한참 뒤에 공개한 셈임.
- **밖으로 위기 조장하는 北, 내부선 '축제 열기'(종합)(4/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축제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달 14일 평양에서 김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국제육상연맹-제26차 만경대상마라톤경기대회'가 진행된다고 밝힘.

- **北 김영남 "김정은, 충정·도덕·의리의 최고 화신"(4/11, 연합뉴스)**
 -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 동지는 충정과 도덕, 의리의 최고 화신"이라고 찬양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김영남 위원장은 이날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및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보고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는 무적필승의 영장"이라고 칭송함.
- **北 김정은, 재일동포 자녀 교육비 지원(4/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101회 생일(4월 15일)을 맞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재일동포 자녀들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으로 1억9천830만 엔(한화 약 22억6천만원)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김정은동향

- 4/9, 김정은 黨 제1비서, 2.13·27 각지 근로자들과 교직원, 학생·어린이들이 보낸 편지에 친필 답장(4.9, 중통)
 - 김정은,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황해남도 인민병원의료일꾼들과 청년동맹원들 등에게 감사(4.10, 중방)
- 4/12, 김정은 黨 제1비서, 4.11 조선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에 모란봉악단 파견 및 화선공연 조치와 '선물' 전달(4.12, 중통·중방·평방)
 - 박봉주·최룡해(김정은 선물 전달)·장성택·김경희·김격식·김양건·황병서·손철주·렴철성·전창복·김장수 등, 모란봉악단과 대연합부대 축하방문
 - 군인들은 연속타격으로 놈들의 군사대상물들과 괴뢰반동 통치기관들을 사정없이 죽탕쳐버릴 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했음.
 -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적극 기여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4.12, 중방)
- 4/13, 김정은 黨 제1비서, 양강도 해산시에 사는 '리을림' 할머니에게 100돌 생일상 전달(4.13, 중통)
- 4/13,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사회정치학 박사 칭호(국제사회과학자연연구소 전달) 수여식, 4.13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4.13, 중방·중통)
 - 김영남, 리영식·리용철(黨 중앙위 부부장), 리혜정(사회과학원장), 김진범(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등 참석
 - 김영남, 4.13 만수대의사당에서 국제사회과학자연연구소 이사들(비슈와나스·하리쉬 굽따 등)과 담화(4.13, 중통·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4.9) 20주년 관련 동정】
 -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백두산총대로 최후승리 떨치리', 4.9 김영남·박봉주 등 참가下 4.25문화회관에서 진행(4.9, 중통·중방) 유원철에게 인민배우칭호 등 수여(4.10, 중통)

나. 군사

- 북한군, 신의주에서 '보란듯' 낙하산 훈련(4/11, 교도통신)
 -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태세로 인해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조성된 가운데, 북한군이 11일 북중 접경지역에서 낙하산 훈련을 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의주에서 최소 50명의 북한 병사들이 헬기에서 순차적으로 낙하하는 모습이 압록강 건너편의 중국 쪽에서 포착됐다. 훈련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됨.

다. 경제

- 조선신보 "北 농장서 생산실적에 따라 현물 분배"(4/11, 조선신보)
 - 북한이 농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제도를 지난해 일부 농장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실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11일에 밝혀짐.
 - 신문은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 협동농장이 지난해 본보기 농장들의 사회주의증산경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분조관리제를 철저히 집행하고 포전담당제를 합리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농장원들 속에서 자기가 맡은 포전에 대한 책임과 자각이 높아졌다고 한다"고 전함.

라. 사회·문화

- 北 전방부대 영농작업...미사일 준비와 대조(4/11, 연합뉴스)
 - 북한군 전방부대가 일제히 봄철 영농작업에 들어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미사일 발사 준비 작업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군의 한 관계자는 11일 "군사분계선(MDL)에서 가까운 북한군 전방부대가 영농작업에 들어갔다"면서 "1호 전투근무태세가 발령됐던 지난달보다 근무태세가 느슨해진 것 같다"고 밝힘.
- 北 '걸그룹' 모란봉악단, 군부대서 첫 위문공연(4/12, 조선중앙통신)
 - '북한판 걸그룹'인 모란봉악단이 지난 11일 인민군 제630대 연합부대를 방문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추대 1주년을 경축하는 공연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제630대 연합부대 장병을 격려하려고 모란



봉악단을 보냈으며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을 통해 부대에 선물도 전달했다고 전함.

- **북·중 접경 단둥 평은…"태양절 축하 방북 준비"4/11, 연합뉴스)**
 -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태세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된 11일 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단둥 해관(세관)에는 이날도 이른 아침부터 북한으로 반입할 물품을 가득 실은 대형 화물차 50여대가 몰려들어 수속을 밟은 뒤 압록강철교를 건너 신의주로 향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제8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9.24~27) 개막식, 9.24 강석주(내각부총리)·리용남(무역상)·김성덕(평양시 인민위 부위원장)·오일훈(조선국제전람회 부사장/개막연설) 등 참가자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9.24, 중통·중방)
 - 중국, 네덜란드, 독일,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 210여개 무역회사들과 단체들 참가
- 김일성종합대학과 유라시아-태평양대학연합의 공동학술토론회 개막식, 9.24 성자립(김일성대 총장 겸 고등교육상) 등 참가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9.24, 중통)
 - 주제 : 인간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물의학 및 생물공학의 발전
 - 토론회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 9.24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9.24, 중통)

2. 대외관계

가. 일반

- **'해킹 피해' 北 일부 사이트 닷새째 복구 안돼(4/8, 연합뉴스)**
 - 최근 국제해커 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에 해킹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일부 웹사이트와 트위터 계정이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연합뉴스의 확인 결과 북한 통일전선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이 운영하는 '구국전선' 홈페이지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얼굴에 저팔계를 합성한 사진이 지난 4일 처음 올라온 이후 이날 오전까지 닷새째 첫 화면에 게시됨.
- **중국인 단둥발 북한 단체관광 잠정 중단(종합)(4/10, 연합뉴스)**
 -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



국민의 대표적인 북한 관광 루트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을 통한 북한 단체관광이 10일부터 잠정 중단됐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함.

- 중국인 대상 북한 관광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단둥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어제 저녁에 '한반도 정세와 관광객 안전을 고려해 북한 관광을 일시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오늘부터 단둥~신의주 1일 버스 관광은 물론 단둥~평양·개성·묘향산 4일 열차·버스 관광 등 단둥에서 출발하는 모든 북한 단체관광이 중단됐다"고 밝힘.

● **北 평양에는 '김일성 생일' 외국인 손님 속속 도착(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연일 전쟁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예년처럼 외국의 친북 인사들이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속속 평양에 도착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함.
- 통신은 지난 10일 "김일성 동지의 생일에 즈음해 라몬 히메네스 로페스 위원장 등 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연구소 대표단, 아나톨리 돌가체흐 위원장 등 러시아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협회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함.
- 또한 "(김일성 생일 경축)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주정결 등 중국 단둥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대표단, 해문강 중국 단둥 한통국제화 운대리유한공사 총경리, 류진생 중국 선양 조선경제무역투자자자문유한공사 이사장과 일행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덧붙임.

● **북한 "일본에는 원자력시설 있다" 위협(4/11, 노동신문)**

- 10일 도쿄에서 확인된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인터넷판은 '대조선 적대시 책동이 일본에 가져다줄 것은 파멸뿐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은 새로운 조선 전쟁(한국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장거리 타격을 중시하는 현대전에서 일본의 전 영토는 우리의 보복 타격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함.
- 노동신문은 이어 "일본 땅에는 수많은 미군 핵기지들과 원자력 관련 시설들, 군사시설들이 곳곳에 있다"며 "일본은 20세기 40년대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시가) 입은 핵 참화와는 대비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을 입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위협함.

● **중국군 수천명, 최근 북한 접경지역에 출동(4/12, 교도통신)**

- 중국군이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 병력 수천명을 출동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12일 중국 단둥(丹東)발로 보도함.
-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 동북지방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선양(瀋陽) 군구 소속 병력 수천명이 지난달 접경도시인 단둥으로 이동한 뒤 이달 들어서까지 대기했다고 전함.



- **北, 미사일요격 명령 日에 "전쟁 불꽃 먼저 튕길 것"(4/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2일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파괴조치명령'을 발동한 것 등을 거론하며 "일본이 순간이라도 움쩍한다면 전쟁의 불꽃은 일본에 먼저 튕길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황금소나기〉를 꿈꾸는 자들에게 경고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의 현 정권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추종해 무력증강과 재침의 기회를 마련해 지난 조선전쟁(한국전쟁) 시기와 같은 어부지리를 얻어보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나. 6자회담(북핵)

- **케리 "北과 대화 원해...선택은 김정은에 달려"(종합)(4/12,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12일 핵없는 한반도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한국을 처음 방문한 케리 장관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뒤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으며, 북한의 국제 의무 준수가 대화의 조건이라면서 "국제적인 의무, 국제적인 표준, 자신들이 수용한 약속을 받아들여야 하며,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日, 北'핵 불꽃' 위협에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할 것"(4/12, 연합뉴스)**
 - 일본은 12일 북한이 "도쿄가 핵의 불꽃에 휩싸일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기자에게 "북한의 발언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그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함.
- **北 김영남 "핵무력 늘려 반미대결전 강도높게 벌이자"(4/13, 조선중앙TV스)**
 -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101회 생일을 하루 앞둔 14일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반대 전면대결전을 강도 높게 벌일 것"을 다짐했다고 조선중앙TV가 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김정은 동지의 선군영도를 받들어 군대를 더욱 강화하고 통일조선의 국보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하며 전 시상황에 들어간 정세에 대처해 반미 전면대결전을 강도높이 벌여야 한다"고 밝힘.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매체 '전쟁위협' 대신 경제기사 늘어…태도 변화?(4/8, 연합뉴스)**
 - 북한이 '폭력적인 언사로 대남·대미 위협 공세를 펼친 데 이어 실제 군사 도발단계로 진입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함.
 - 5MW(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를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 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음.
 -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포함한 군사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고(高)고도방어체계(THAAD)를 곧바로 긴급 투입할 계획임.
- **北 "어나니머스 해킹범죄는 南 당국의 조작" 주장(4/8,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8일 국제해커조직 '어나니머스'에 최근 자체 홈페이지가 해킹당한 사건이 "남조선정보원을 비롯한 괴뢰패당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우리민족끼리가 8일 전함.
 - 이 웹사이트는 이날 편집국 명의로 올린 '범죄적인 해킹책동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우리 홈페이지에 대한 이번 '어나니머스'의 해킹행위는 인터넷 활동에 대한 엄중한 범죄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힘.
 - 특히 이번 해킹사건을 계기로 '중북논란'이 제기된 점, 어나니머스가 6·25를 계기로 북한 인터넷을 재공격하기로 한 점, 해킹을 했다고 주장하는 어나니머스 회원이 한국어·영어를 사용하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이런) 모든 사실은 해킹 책동이 괴뢰패당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함.
- **北, 남한 시민단체에 "반미항전 하자" 팩스 보내(4/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달 남북관계를 전시상황으로 규정한 특별성명을 발표한 직후 남한 시민단체들에 "반미항전에 함께 하자"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9일 통일부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는 "(귀 단체가) 민족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 항전에 적극 펼쳐나서리라는 확고한 기대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팩스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 보냄.
- **北, 무수단 미사일 발사준비 끝낸 상태(종합)(4/9, 연합뉴스)**
 - 북한이 강원도 지역 동해안으로 이송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북수의 정부 소식통은 9일 "동해안으로 옮겨진 북한 미사일 동향을 추적한 결과 발사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기술적으로는 내일이라도 발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함.
 - 군은 이르면 10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해킹 북한IP의 등록주소는 '평양시 류경동'(4/11, 연합뉴스)**
 - 북한이 3·20 사이버테러에 사용한 인터넷프로토콜(IP)주소가 등록된 지리적 주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 보통강구역 류경동'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후이즈' IP검색 서비스에 따르면 북한이 3·20 사이버테러에 사용한 IP주소인 '175.45.178.xx'의 등록자 주소는 보통강구역 류경동(Ryugyong-dong Potong-gang District)임.
 - 류경동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이름을 딴 류경정주영체육관과 류경호텔 등이 있는 평양 시내 명소로 알려진 곳임.
 - **北 "南 보수언론, 병진노선에 악담"(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1일 남한의 일부 언론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에 '악담'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세치 혀바닥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을 거론하며 "보수언론들이 '말도발 수준을 뛰어넘는 핵무장 시도'라느니, '고도의 벼랑끝 전술'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병진노선의 위력을 약화시키려고 별의별 잡소리를 쫓쳐대고 있다"고 말함.
 - **北, '3·20 해킹' 부인... "고의적 도발" 주장(종합)(4/12, 평양방송)**
 - 북한은 12일 '3·20 해킹'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밝히고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려는 고의적인 도발이라고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 평양방송을 통해 밝힘.
 -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인민군신문사 기자와 문답에서 "3·20 해킹공격사건의 북소행설은 천안호 침몰사건의 재판으로 미국의 핵전쟁 소동에 편승해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한 계선으로 몰아가려는 고의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함.
 - **北, 남한군 '초토화 전략' 비난(4/12,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2일 서기국 보도에서 "최근 남조선 괴뢰 군부 호전광들이 북침도발 기도를 드러낸 '북군 초토화 전략'이라는 것을 들고나왔다"며 이 전략이 '작전계획 5015'에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침전쟁행위로 개성공업지구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것과 관련해 김양건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8일 현지를 료해(점검)하였다"며 김 비서가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철저히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함.

- '폐쇄위기' 단동 축구화 공장 지난달 정상화(4/9, 연합뉴스)
 - 인천시가 추진하는 유일한 남북교류사업인 중국 단둥시 축구화 공장이 최근 정상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단동 축구화 공장은 지난해 말 동절기 휴가를 떠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비자 발급이 늦어져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됨.
 -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10일부터 공장이 정상 가동돼 현재 북한 근로자 2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9일 밝힘.
- "개성공단 北근로자 출근안해"...조업중단(종합2보)(4/9,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을 발표한 다음날인 9일 북측 근로자들이 예상대로 개성공단 업체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 생산직 근로자들이 오늘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업체별로 1~2명씩 경비직 근로자만 약 200명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며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협력부에서 일하는 북한인 8명도 오늘 출근했다"고 전함.
- 北, 南 민간단체 지원 의약품 받아(4/11,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의 전시상황 선언 등으로 대남 위협을 이어가면서도 남한 민간단체가 지원한 의약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정부 관계자는 11일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이 최근 배편으로 보낸 결핵약을 북한이 접수했다"고 밝힘.
 - 유진벨재단은 지난달 22일 평택항을 출발하는 배편으로 결핵약을 북한에 보냈고 이 약품은 중국 다롄항을 거쳐 지난 4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함.
- 北 매체 "개성공단 잠정중단은 우리 존엄 모독 때문"(4/11,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개성공단이 잠정중단된 책임은 자신들의 '존엄'을 모독한 남한에 있다고 11일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개성공단 사태, 책임은 전적으로'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개성공업지구사업이 잠정중지된 현 사태는 바로 남조선괴뢰 패당이 가중되는 도발로 북남관계를 전시상태로까지 몰아넣고는 갖은 고약한 입질을 다 해대며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밝힘.
- 北 "개성공단 사태, 청와대가 바른 선택해야"(종합)(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1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정권까지 우리와의 대결을 추구한다면 개성공업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북한에서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남조선 괴뢰당국과 전쟁광신자들은 저들이 저지른 반민족적 죄행에 대해 석고대죄하기는 커녕 도리어 '실망'이니, '유감'이니 하면서 우리의 중대조치를 시비질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北 "자주권 침해당하면서까지 개성공단 용인못해"(4/13,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3일 논평에서 "생명과도 같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공업지구의 존재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괴뢰패당들 속에서는 (개성공단)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황당무계한 꾀변들과 악담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가 개성공업지구 문제와 관련하여 '형제'니, '가보'니 뭐니 하며 떠들어대고 괴뢰통일부를 비롯한 역적패당이 '책임'이니, '용납할 수 없다'느니 하는 잡소리를 해대고 있다"고 비난함.

■ **기타 (대남)**

- 北 김양건(黨 비서), 4.8 '개성공단 北 근로자들 전원 철수·개성공단사업 잠정중단 및 존폐여부 검토' 선언 '담화' "위임에 따라" 발표(4.8, 중통·중방)
 - 개성공업지구가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의 마당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비극이며 그러한 개성공업지구는 없는 것보다 못함.
 -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렸음.
 - 김양건, 4.8 개성공단 방문과 현지 '대책협의'에서 "공업지구의 운명이 경각에 이르게 된데 대한 언급"과 "어떤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데 대한 과업" 지시(4.8, 중통·중방)
 - 北 「조평통」 대변인,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의 '4.11 對北 대화제의'에 대해 "아무 내용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결자세부터 버려야 한다"고 4.14 중통기자 대답(4.14, 중통·중방)
 - 대화제의는 "대결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술책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님."
 -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대화의지가 있다면 근본적인 대결자세부터 버려야 함.
 - 대통령(北,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함. 등)과 與黨·언론들의 '北, 개성공단 조업 중단' 지적에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한에게 있다'고 왜곡 책임 전가(4.14, 중통·노동신문/개성공업지구 폐쇄위기는 누가 몰아왔는가)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중국, 북미 직접 대화 촉구>(4/8,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북한과 미국의 직접 대화를 촉구했음.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국들이 대화와 접촉에 나서라는 중국의 주장이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 관련국들이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답했음.
- 홍 대변인은 "관련국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관심사를 이해해야 한다"며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관련국 사이의 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는 "조선(북한) 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대화와 담판"이라며 "한반도의 전란은 누구의 이익에도 들어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은 누구든 반도의 평화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음.
- 한편 홍 대변인은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이 중국의 대북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는 지적에 "조선 핵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관련국 모두가 짚어준 공동 책임"이라며 "중국은 반도의 평화·안정과 비핵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 매케인 의원은 7일(현지시간) 미국 방송에 출연, "중국은 (한반도의)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음.

● <北미사일 도발 내용 따라 안보리 대응 달라져>(4/11, 연합뉴스)

-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곧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 유엔 차원에서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지 주목됨. 유엔은 그동안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 언론성명, 의장성명, 결의안 등 다양한 수위의 안보리 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해왔음.
- 북한의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의 조치 대상이 된 것은 대포동 1호가 처음. 앞서 북한은 1993년 5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1호를 동해상으로 발사했지만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음.
-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대포동1호(사거리 1천800~2천km 추정)를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음. 북한이 광명성1호라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한 이 로켓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발사장에서 1천400



km 떨어진 지점에 추락

- 이에 대해 안보리는 같은 해 9월 15일 의장의 구두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이 사전통고 없이 '로켓 추진 물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음. 안보리는 2006년 7월 5일 이뤄진 대포동 2호 발사 때는 대응 수위를 높였음.
- 이 로켓은 발사 42초 만에 동해로 떨어졌지만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처음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음. 2006년 7월15일 채택된 이 결의 1695호를 통해 안보리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했음. 북한의 핵 및 미사일과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첫 결의라는 평가가 나왔음.
- 2009년 4월 5일 북한은 은하2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음. 북한이 광명성2호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이 로켓은 1~3단 분리에 성공했으며 3천800km를 비행했음. 안보리는 이에 대해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처음으로 북한의 개인·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음.
- 북한은 2009년 7월 4일 스커드 및 노동 등 7발의 단·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유엔 안보리 의장은 구두 언론 성명을 통해 이를 규탄했음. 북한이 지난해 4월과 12월에 잇따라 발사한 은하3호 장거리 로켓은 각각 의장성명과 결의 2087호 채택이라는 안보리 조치로 이어졌음. 2087호는 북한의 로켓에 대응해 처음으로 채택된 제재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란 점이 특징
- 북한이 이번에 발사할 것으로 알려진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 3천~4천 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임. 일부에서는 장거리가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해도 유엔 차원의 수준 높은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있음.
-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안보리가 어떤 형식의 조치를 할지는 미사일 발사 이후 실제 협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의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 방향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G8 외무장관 "北미사일 발사시 추가 제재">(4/12, 연합뉴스)

- 주요 8개국(G8)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도발 위협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미사일 실험 강행시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음.
- G8 외무장관들은 11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의 회담을 마치고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 및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진행을 우려하며 이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음.
-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 발언과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진을 강도 높은 용어로 규탄한다"며 "최근의 미사일 실험은 지역 안정과 국제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음.
- 성명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적인 수사(rhetoric)는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신용할 수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G8 외무장관들은 또 북한에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할 것을 강조하고, 영변 핵 시설 재가동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음.



- 외무장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전쟁 위협 발언과 미사일 발사 실험 움직임 등 도발 기류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북한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G8 차원에서 중대한 수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 그는 "G8 장관 모두가 북한의 전쟁 위협 발언을 비난했으며 북한이 다자간 대화에 즉각 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와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시리아 사태 의제에 대해서는 유혈 사태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고자 인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정치 체제를 바꾸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그러나 러시아의 반대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음.
 - 이번 회담에는 시리아 반정부 단체 지도자들이 초청돼 각국 외무장관들을 상대로 아사드 정권 제재와 무기 지원 등을 호소. 이밖에 G8 외무장관들은 전쟁 성폭력 종식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2천300만 파운드의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음.
- <백악관 "오바마, 필요한 대북한 예방조치 지시">(4/12,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안보팀에 북한 위협에 대비해 미국 본토와 동맹을 방어할 수 있는 필요한 예방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질문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음.
 - 카니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안보팀에 미국 본토와 동맹들을 모두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도록 지시해왔다. 북한 정권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사와 도발적인 행동을 대통령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부가 취한 각종 조치와 그동안 보도된 다양한 대책을 통해 미국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힌 셈"이라고 부연했음. 또 북한의 최근 언행은 익숙한 행동 패턴이라고 재차 강조
 - 그는 "'사이클(cycles)'이란 말로 이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에도 이런 사이클을 봐왔다. 항상 도움이 되지 않고 항상 불안정한 것이며 북한 주민의 이해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날 오후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회동에서도 북한 이슈가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음. 카니 대변인은 "반 총장과 논의할 여러 현안이 있다. 북한 문제도 확실히 그 중 하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불과 얼마 전 러시아와 중국의 찬성을 얻어 북한을 제재하기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설명
 - 아울러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 과 공조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언행의 수위를 낮추도록 러시아와 중국이 가진 '독특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전날 밝힌 '위험선(dangerous line)'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설정한 '금지선(red line)'에 대해서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직답을 피해 나갔음.
 - 헤이글 장관은 전날 "북한은 호전적 언사와 행동으로 위험한 선에 근접하고 있다. 북한의 언행은 인화성 높은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카니 대변인은 "어떤 금지선이 있는지 등의 가정은 전제하지 않겠다. 국제 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 고립과 제재만 가져올 뿐이고 일련의 도발적인 행동과 성명에 대한 반사적인 행동만 뒤따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 개발이 위험위험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헤이글 장관 발언은 이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본토와 동맹의 안보를 향상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신중하게 취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 카니 대변인은 "북한에 길은 열려 있다. 고립과 빈곤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국제 사회에 동참함으로써 대다수 주민의 삶을 개선할 기회가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그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러 외무 "북핵 6자회담 스위스 개최 지지">(4/12, 연합뉴스)

- 러시아는 스위스에서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밝혔음.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를 방문 중인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디디에 부르할테르 스위스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이 스위스에서 열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 라브로프는 "스위스는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회담을 위해 손님을 환대하는 영토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은 입장을 표시했음. 부르할테르 장관도 "스위스는 항상 중재국이 되고 싶으며 모든 협상 당사자들을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선 회담 참가국들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위스는 한국전쟁 휴전협정 중립국 감시단의 일원임.
- 한편, 이에 앞서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도 지난 8일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한 간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을 중재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 스위스 외무부는 이 같은 의사를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당국에 밝혀왔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나. 미·북 관계

● <미국 "북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선언 유감">(4/9,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 선언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음.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에는 5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일하고 있다"면서 "이를 폐쇄한다면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 벤트렐 부대변인은 특히 "개성공단 폐쇄는 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면서 "이런 방향을 고집한다면 유감스러운 행동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그는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보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것으로 압박과 고립을 심화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런 행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일론적인 답변을 내놨음.
 - 이어 벤트렐 부대변인은 북한에 미국 시민이 얼마나 체류하고 있는지는 질문에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다고 밝혔음. 그는 "북한은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스웨덴을 통해 한다"면서 "미국 국민에게 (북한 여행) 등록을 권고하지만 믿을만한 (체류자) 통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 그는 다만 "등록한 미국 시민이 (북한에) 있다"면서 "인도주의 사업을 하는 이들이 자주 드나든다"고 말했다. 벤트렐 부대변인은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우리는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해 도발적 언사와 위협을 중단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도록 만들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
 - 그는 특히 "중국은 북한과 경제적, 외교적, 역사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 기간 북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앞서 시 주석은 하이난(海南)성 쓰야(三亚)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어느 일방이 자신의 개별적 이익을 위해 지역이나 세계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밝혀, 북한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음.
 -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적 언사와 위협을 제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카니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이 지역의 안정은 역내 모든 국가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미 국가정보국장 "북한 도발 위협, 대내외 선전용">(4/12, 미국의소리)
- 미국 하원 정보위위원회가 11일 '미국이 직면한 전세계 위협'이란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음. 증인으로 출석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최근 북한의 호전적인 발언들을 대내외 선전용으로 분석. 무엇보다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것임.



- 윤병세 장관은 "한미 양국은 북한이 도발과 위협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 및 인도적 지원 방침과 관련, "미국은 한국의 주권이나 독립적인 선택 의견을 방해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그러나 미국의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의무준수 약속이 없고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며 한국과의 '온도차'를 엿보였음.

● <北 "한반도 긴장은 '핵전쟁 책동' 美 책임">(4/13, 연합뉴스)

- 북한은 13일 한반도 정세의 위기가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의 책동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이 '존 스테니스' 등 핵 추진 항공모함 2척에 이어 핵잠수함 '사이엔'을 한반도와 가까운 수역에 배치해 전쟁 분위기를 극도로 고조했다며 "미국의 발악적인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최악의 국면에 처하였다"고 비난했음.
- 특히, "미국이 수십 년 전부터 북침 핵전쟁 연습에 매달려오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모든 종류의 핵 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대조선 압살책동에 미쳐 날뛰는 적은 일찌기 없다"고 밝혔다.
- 논평은 "미국은 조선반도의 현 사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함으로써 국제적인 압박공세를 펴는 한편 저들의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뿌리채 들어내기 위한 반미대결전을 계속 강도 높게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 중·북 관계

● <중국 "긴장 고조 행위 반대"...북한 비판>(4/9, 연합뉴스)

- 중국이 남한 내 외국인 대피를 권고, 한반도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킨 북한을 비판했음.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중국은 어느 나라일지라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조선반도의 정세가 매우 복잡, 민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내 자국 국민을 철수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즉답을 피한 채 "관련국들이 (외국) 국민의 안전 및 합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 홍 대변인은 한반도가 중국의 이웃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집 대문'에서 전란이 발생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도의 평화·안정 수호는 관련국들이 짚어진 공동 책임"이라며 "각 국가가 도발적 행동이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정세를 이진으로 돌려놓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음.



- 한 외교 소식통은 "현 상황에서 중국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3차 핵실험 이후 북한과의 신뢰가 크게 저해된 터여서 중재자로서의 중국의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음.

● <중국, 북중접경 도시서 주민 대피 훈련>(4/11, 연합뉴스)

-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가능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중국이 북중 접경 도시에서 이례적으로 대규모 주민 대피 훈련을 했음. 11일 지린성 훈춘시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내 중심 주거 지역인 징허(靖和)거리에서 공습 및 재난 상황을 가정한 주민 긴급 대피 훈련이 실시됐음.
- 이날 훈련은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진 가운데 주민들이 미리 지정된 지하 방공호로 대피하는 방식으로 30여 분 가량 진행됐음. 훈련에 참여한 사람은 주민, 재난 당국 관계자, 의료진 등 수백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음.
- 훈춘시에서 기관이나 학교가 아닌 주민 밀집 거주지에서 공습 또는 재난 상황을 가정한 긴급 대피 훈련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음. 한 주민은 "훈춘서 오래 살았지만, 시내에서 공습 대피 훈련이 진행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음.
- 이번 훈련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예고되고, 중국 내부에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진행된 것임.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런 훈련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며 "중국이 한반도에서 만에 하나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훈련을 기획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음.
- 일각에서는 동부 해안에서 발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이 고장을 일으켜 중국 쪽으로 잘못 방향을 틀거나, 중도 폭발해 파편이 자국 영토로 떨어지는 상황에 대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옴.
- 이와 관련, 미국의 군사전문매체 워싱턴프리비컨(WFVB)은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과 인접한 동북부 지역에서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음. 중국인 관광객들이 10일부터 랴오닝성 단둥의 육로를 이용한 북한 여행을 중단하는 등 북중 접경에서는 한반도의 유사 상황에 대비하려는 중국의 각종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음.
-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담담한 반응을 보였음.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여행 중단은 여행사와 여행객들의 자발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중조(북중) 국경은 현재 정상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음.

● <중국 환구시보, '북한 포기론' 반박>(4/12, 연합뉴스)

-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중국 일각에서 '북한 포기론'까지 제기됐지만 이는 중국의 외교적 선택이 될 수 없다고 관영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반박했음.
- 환구시보는 12일 '조선(북한) 포기 주장은 유치하고 극단적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선을 포기하지는 주장은 지나치게 간단한 것으로 중국의



- 정책 결정자들이 이런 유치한 견해를 따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중국의 지정학적 전선이라며 한국, 일본이라는 전략적 지지 세력을 가진 미국이 아태 지역으로 복귀하는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한·미·일에 대응하는 보호벽이라고 규정했음.
- 환구시보는 중국에 우호적인 북한의 존재가 동북아 질서에 전략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중국이 먼저 북한을 버리는 것은 외교적 선택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환구시보는 "우리는 조선의 국가 안전을 수호할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안정적 집권도 지지한다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중·조 우익은 평양이 갖는 안전의 영원한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 환구시보는 북한이 핵실험 등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한 북·중 관계가 일정한 마찰을 빚는 것을 필연적이지만 북·중 관계가 과거 중·소 관계처럼 파탄을 맞을 가능성은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음.
 - 이 신문은 "중국 사회는 북한에 갖는 강한 불만을 감출 필요가 없고 평양에 진실한 감정을 전해야 한다"며 "평양의 행동이 중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건드리면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 이는 중국이 평양을 적대시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부연했음.
 - 환구시보는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와 관련, "중국의 대조선 정책의 일부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추세지만 이런 조정은 미·일·한과 같은 편이 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음.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비록 당·정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신문은 아니지만 중국의 주류 여론을 반영하는 신문으로 평가됨. 한편, 인민일보 고급기자인 당강(丁剛)은 이날 환구시보에 실은 기고문에서 중국이 과거 수십만 생명을 바쳐 북한을 지켜준 만큼 북한이 중국인의 감정을 고려,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음.

라. 일·북 관계

● <"일본, 9일 방위성 등에 패트리엇 배치">(4/9, 연합뉴스)

- 일본이 수도권 주변에 북한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9일 보도했음. 일본 정부는 이르면 9일 새벽 도쿄 이치가야(市谷)의 방위성 부지 안에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을 설치할 예정임.
- 또 사이타마(埼玉)현 아사카(朝霞) 자위대 주둔지와 지바(千葉)현 나라시노(習志野) 자위대 주둔지에도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할 방침임. 일본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당분간 보류할 예정이었지만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 북한 미사일 요격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동해에는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를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투입했음.



- 일본은 북한이 발사 움직임을 보인 미사일 '무수단'의 최대 사거리(4천 km) 안에 일본 전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 <“일본, 북한 미사일 발사시 독자 제재 강화 검토”>(4/10, 연합뉴스)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NHK가 10일 보도했음. 이 방송은 일본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에 관련된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고 전했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월27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 답변 시 핵·미사일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음. 당시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로 이같은 방안을 거론했음.
 - 일본은 지난 2월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 방북 제한 대상자를 총련 의장급 4명에서 부의장급 5명을 포함한 9명으로 늘리는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한편, 아베 신조 총리는 9일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에게 독자 제재 강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냉정하게 관계국과 연계하면서 할 일을 하겠다"며 "최근의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북한 "일본에는 원자력시설 있다" 위협>(4/11, 연합뉴스)
 - 북한 당 기관지가 '일본에는 원자력 시설이 있다'며 1940년대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핵 참화를 시사하는 논평을 실었음.
 - 10일 도쿄에서 확인된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인터넷판은 '대조선 적대시 책동이 일본에 가져다줄 것은 파멸뿐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은 새로운 조선 전쟁(한국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장거리 타격을 중시하는 현대전에서 일본의 전 영토는 우리의 보복 타격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음.
 - 노동신문은 이어 "일본 땅에는 수많은 미군 핵기지들과 원자력 관련 시설들, 군사시설들이 곳곳에 있다"며 "일본은 20세기 40년대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시가) 입은 핵 참화와는 대비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을 입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위협했음.
 - 이 신문은 또 "지난 조선 전쟁 때 우리는 일본에 있는 침략 기지를 보복 공격할 능력이 없었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인민군대는 일본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제 침략군기지들까지 격파해버릴 보복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北, 미사일요격 명령 일에 "전쟁 불꽃 먼저 튕길 것">(4/12, 연합뉴스)
 - 북한은 12일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파괴조치명령'을 발동한 것 등을 거론하며 "일본이 순간이라도 움쩍한다면 전쟁의 불꽃



- 은 일본에 먼저 튀길 것"이라고 위협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황금소나기〉를 꿈꾸는 자들에게 경고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의 현 정권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추종해 무력증강과 재침의 기회를 마련해 지난 조선전쟁(한국전쟁) 시기와 같은 어부지리를 얻어보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황금소나기'는 일본이 한국전쟁 때 유엔군에 공격기지, 보급기지, 수리기지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군수 관련 기업체 등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임.
- 통신은 최근 미군의 스텔스전투기 F-22(랩터)가 한미독수리(FE) 연합 훈련 참가하려고 주일미군 기지에서 한국으로 전개한 것과 관련, "지금 일본은 새로운 조선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며 "상전(미국)을 믿고 조선재침에 광분하는 경거망동을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음.
- 또 "우리는 일본이 지난 조선침략전쟁의 공범자였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조선반도에서 '황금소나기'를 꿈꾸는 자들은 핵 불벼락에 타 죽게 될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음.

● <일본, 미·일 공조로 최악상황 방지 모색>(4/13,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는 한편으로 실제 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질 경우의 대응 조치 강구에도 부심하고 있음.
- 일본은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인 15일까지 신형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과 이미 실전배치된 중거리 미사일 '노동' 등을 동시에 발사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 일본은 이미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수도권 등에 배치하고 이지스함 2척을 동해에 투입하는 등 24시간 미사일 방어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음.
- 일본으로서는 만약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역에 떨어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가 반격해야 하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또한 북한 미사일이 괌 등 미국 영역에 떨어져 미군이 반격할 경우 주변사태법에 따라 미군 후방지원에 나서야 할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이와 관련,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13일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을 향해 발사하면 자위권 행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시바 간사장은 이날 한 TV 방송에 출연,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고 쓰면 피해가 생기든 안 생기든 전쟁"이라고 강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견제했음.
-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미군기지가 있는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시와 오키나와(沖縄)현을 "사정권으로 한다"고 위협하는 기사를 게재. 하지만 일본 정부도 북한 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져 자위대가 반격에 나서야 하는 등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원치 않는 입장임.
-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14일 도쿄에서 열리는 마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 확인 등을 통해 북한을 견제하는 한편으로 도발 자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마. 러·북 관계

●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 철수계획없어">(4/8,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의 권고에도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조만간 직원들을 대피시킬 계획이 없다고 대사관 관계자가 8일(현지시간) 밝혔다.
-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 공보관 데니스 삼소노프는 이날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직원 철수와 같은 급격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삼소노프는 그러면서 "현재 대사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북한 외무성은 지난 5일 러시아를 비롯한 평양 주재 외국 공관에 한반도 긴장 사태와 관련해 외교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철수를 권고한 바 있음.
-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 공관들은 북한 당국의 통보가 한반도 위기를 대외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선전전의 일환인 것으로 판단하고 직원 철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 기 타

● <한·EU 외교장관 통화...북한문제 협의>(4/9,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의 외교장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캐서린 애쉬튼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통화하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 윤 장관은 전날 오후 늦게 2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위협과 관련, "정부는 확고한 대북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EU측도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여론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 애쉬튼 대표는 북한의 도발위협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 등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10~11일 진행되는 G8(주요 8개국) 외무장관회담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과 애쉬튼 대표는 한·EU 관계 발전 심화 방안, 이란 및 말리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 앞서 윤 장관은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교부 장관과도 통화하고 북한·북핵 문제 및 양국 간 고위급 인사 교류 방안에 관하여 협의했다.

● <나토 사무총장 "北 위협·추가행동 즉각 중단돼야">(4/11, 연합뉴스)

-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11일 "현재와 같은 북한의 위협적 발언과 추가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스무센 총장은 이날 오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면담에서 "나토로서도 최근 북한이 보이는 일련의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 라스무센 총장은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 국제사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통해 추가 도발을 차단하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방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윤 장관은 "나토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위협과 도발로 북한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과 라스무센 총장은 한-나토간 협력방안, 범세계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라스무센 총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 냉전 종식과 유럽 내 평화·협력의 기초를 제공한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험을 설명한 뒤 "이런 경험이 동북아에서의 신뢰 프로세스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 윤 장관은 "한-나토 개별 파트너십 협력프로그램이 양측간 안보분야 실질 협력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이 3·20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부의 중간조사 결과를 소개한 데 대해 라스무센 총장은 "양측 간 사이버방위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자"고 답했다.
- <北 미사일탐재 핵무기보유 가능성' 두고 미국내 혼선>(4/12,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구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증거가 11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공개됐다.
 - 그러나 국방부가 '정확한 내용이라 하기 어렵다'며 해명하고 나서는 등 평가가 엇갈려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더그 램본(공화·콜로라도) 의원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보고서를 공개했다.
 -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자신있게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무기의) 신뢰도는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시사한 첫 사례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늦게 공식 성명을 내고 무마에 나섰다.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해당 구절에 언급된 종류와 같은 핵 능력을 완전히 실험, 개발 및 입증했다고 시사하기는 부정확할(inaccurate)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북한에 국제적 의무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미국 관리는 이 보고서가 정보기관들의 승인을 완전히 거치지 않은



- 낮은 단계의 평가라고 전했음.
- 익명을 요구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도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행정부의 평가가 바뀌지는 않았다고 AFP에 해명했음. 이 관계자는 "북한은 이런 능력을 입증한 적이 전혀 없고 현재 그럴 수 있는 상태라고도 보지 않는다"고 말했음.
 - 청문회에 출석한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은 "나는 그 보고서를 보지 못하고, 이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음. 한편, 뎀프시 의장은 최근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이 주장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음.
 - 그는 "우리는 어떤 동맹에 대해서도 핵개발을 권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확장억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고, 최근 B-52 폭격기 등을 통해 이를 보여줬다"고 강조. 그는 또 "한국과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더 늘리도록 했다"면서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국 국방부 장관 "한국에 핵우산 지속 제공">(4/9, 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방어의 지는 확고하다"면서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하는 확장 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말했음.
 - 카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의 아시아 국방재균형'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우리의 핵능력은 동맹의 보호를 위해 활용된다"며 이같이 말했음.
 - 그는 또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맞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미국은 2017년까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 등 서부 해안에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 14기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지난달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재확인.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꺾음 중거리 미사일 요격망인 '고고도 방어체계(THAAD)'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음.
 -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최근 새로운 공동 도발대비 계획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카터 장관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 야욕을 멈추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유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



- 본, 중국, 러시아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미국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에 증원되는 전력의 전투태세 정비와 현대화작업은 지속된다"고 말했다.
 - 카터 부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미군의 중심적 역할 속에 지난 60년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왔다"면서 "아시아 재균형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개념"이라고 전했다.
 - 그는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설정은 미국의 재균형 전략의 핵심적 부분"이라면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며, 특히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미 12일 서울서 외교장관회담..北위협 논의>(4/9,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 위협 대응책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논의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케리 장관은 12~13일 방한한다"면서 "12일 오후 도착하는 케리 장관은 오후 늦게 윤 장관과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 대변인은 "지난주 첫 번째 장관회담에 이어 최근 북한의 위협 고조와 관련한 한반도 정세 및 대북 공조방안, 5월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등 양측간 주요 현안을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
 - 조 대변인은 "한미 양국이 열흘 간격으로 연이어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양국 정부의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케리 장관은 방한 기간 박근혜 대통령 예방, 김관진 국방장관과의 면담 등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 대변인은 "양국 외교장관 회담과 기자회견 외의 다른 일정은 확정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 <한미, 北 미사일 동향 감시 '워치콘' 상향>(4/10, 연합뉴스)
-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이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높였다"고 밝혔다.
 - 워치콘이 격상되면 대북 정보감시 자산이 증강 운영되고 정보분석 요원 수도 평소 대비 2~3배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정찰위성과 유·무인 정찰기 등 정찰자산을 총동원해 동해지역의 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음.
 - 우리 군은 이르면 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北 미사일 발사 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임. 소장급이 팀장을 맡은 이 TF는 10여명의 장성·영관급 장교로 구성돼 있음. 군 당국은



북한이 동해안으로 이송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군 관계자는 "오늘부터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무수단과 함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음.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1발과 스커드 4발, 노동 2발 등 7발을, 2009년 7월 4일에는 스커드 5발과 노동 2발 등 7발을 각각 발사한 바 있음.
-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과 스커드·노동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징후도 나타나고 있음.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강원도 원산 지역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2기뿐 아니라 함경남도과 강원도에 걸쳐 있는 동한만 일대에서 그간 보이지 않던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TEL) 4~5대가 추가로 식별됐다"고 밝혔음.
- 추가 식별된 TEL은 사거리 300~500km의 스커드, 1천300~1천500km의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비로 분석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이날 북한이 무수단 2기를 대기시킨 것 외에 며칠 전부터 함경북도에 별도의 미사일 부대를 배치해 동시 발사 태세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
- 한편, 미국 CNN 방송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 북한이 동부 해안에서 약 10마일(16km) 떨어진 곳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미 액체연료 주입을 마친 상태로 발사 준비가 끝났다고 보도했음.
-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에 액체연료를 주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액체연료를 주입하고 발사할 때까지 2주 정도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미사일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밝혔음.
- 당국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동해 방향으로 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도 남쪽으로 쏘아 우리 영공을 지나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음. 이 관계자는 "무수단은 동쪽과 남쪽 두 방향을 쏠 수 있다"며 "동쪽으로 쏜다면 일본에 부담을 덜 주는 방안으로 홋카이도와 혼슈(일본 본토) 사이를 통과하도록 쏠 수 있고, 남쪽으로 쏘면 남한을 통과한 뒤 제주도 동쪽과 일본 규슈 사이를 지나 필리핀 동쪽 해역에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사거리 2천500~4천km인 무수단 미사일이 우리 영공을 지나가면 고도가 100km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요격체계(PAC-2)로는 요격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에 피해가 있으면 그만큼 응징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면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1단 추진체가 떨어지는 지점이 나오고 궤적을 알 수 있다"며 "요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음.

○ <케리 "한국의 현재는 옳은 선택의 결과물">(4/12,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 발전한) 한국의



현재 모습은 옳은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 보여주는 사례 "라면서 북한의 옳은 선택을 촉구했음.

- 북한과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케리 장관은 1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음. 이날 행사에는 성김 주한미국대사, 팻 게인스 암참 회장, 에이미 잭슨 암참 대표 등과 한덕수 한국무협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한미 재계의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 또 국내외 주요 언론매체 기자 80여명이 몰려 열띤 취재에 나섰음.
- 케리 장관은 "암참의 설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현재 한국의 모습은 우리가 60년 전 기대했던 최고의 결과물이고 암참도 이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면서 한미 경제계 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 그는 또 "지난 60년간 한미 동맹은 더욱 단단해져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한국은 시리아·이란 제재에 협력했고 경제면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자동차산업과 농업 등에서 양쪽 모두 이득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세계는 더 이상의 핵보유국과 핵무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13일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 해결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어 "북한을 제외한 모든 관련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업포를 놓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겠다"고 단언했음.

● <한미 외교장관, 원자력협정 여전히 온도차>(4/12, 연합뉴스)

- 한미 양국 외교장관은 12일 당면한 현안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 원만한 타결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각론에서는 뚜렷한 온도차를 드러냈음.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열기로 합의한 수석대표간 협상에서 큰 기닥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됨.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양국 외교장관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정이 희망적으로 될 것으로 본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5월 워싱턴에 올 때까지 여러 옵션 중 한 옵션, 다른 옵션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낙관적인 언급을 했음.
- 그러나 미국의 속내는 한국의 양보를 강요하는데 방점이 찍혔다는 관측이 많음. 구체적으로 케리 장관은 "지금 상당히 우리가 민감한 시점에 있다"면서 "북한과의 문제, 이란 문제 등의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다"고 언급, 원자력협정 협상을 바라보는 미국의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음.
- 케리 장관의 언급은 핵비확산 정책을 고수하는 미국이 한국에 예외를 적용해 재처리 및 농축을 허용할 경우 '골칫거리' 국가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음.
- 미국은 재처리 및 농축 문제 등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동 결정하도록(사실상 미국의 사전동의)돼 있는 현 협정의 골간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다만 케리 장관이 "한국은 평화로운 민수용 원자력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의 효과적인 관리와 안전장치에 대해 "존경심과 믿음이 있다"고 말한 것에는 다소간의 개정 여지를 남겨둔 것 아 니하는 시각도 있음.

- 우리 정부의 입장도 여전히 강하고 원칙적.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주요 기준과 관련, △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 처리 △ 안정적 핵연료 공급 확보 △ 원전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
- 그러면서 "이 같은 기준에 맞게 되길 희망하며 한미동맹과 신뢰를 기반 으로 그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음.
- 윤 장관의 설명은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사용후 연료 재처리나 저농축 우라늄 자체생산에 대한 권리를 협정에 반영해 선진적 으로 협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됨.
- 핵비확산 차원에서 한국에라도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미국과 현실적인 수요에 의해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한국과의 원자력개정 협상 문제는 조만간 열릴 수석대표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
- 일각에서는 양국이 올해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과 양국 관계를 그려쳐 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한미, 북한과의 대화 '온도·보폭 차이'>(4/14,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 공세에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기존의 투 트랙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보다 대북 대화를 향해 더 큰 폭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런 모습은 관측됐 음.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희망 은 대화"라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국제 의무 준수'를 대화의 조건으로 분명히 했음.
- 미국의 제안으로 다음날 새벽 발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에서 도 이런 미국의 입장은 재확인됐음.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9·19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이 성명은 핵 무기와 관련된 북한의 선제적인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약속 준수가 북한과의 대화의 조건이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사실상 되풀이 된 것.
- 케리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였다"는 평가도 나옴. 정부의 한 소식통은 14일 "케리 장관이 대화를 언급하 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많은 단서가 있다"고 지적했음. 실제 미국은 대화 보다는 압박에 여전히 무게를 싣고 있다는 관측이 많음.



- 다만 미국 역시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대응해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동안 대북 무력시위를 벌인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계획 연기 등을 통해 압박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이런 차원으로 풀이됨.
- 이에 비해 지난 11일 북한에 대해 대화제의를 한 우리 정부는 압박과 대화 병행 기조 속에서 대화에 한층 무게를 실는 분위기.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을 통해 우리의 대화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왔지만 이를 북한의 대화제의 거부로는 해석하지 않았음.
- 개성공단 사태를 계기로 대화 제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잘되면 대화 의제 확대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태도임.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화 주제가 개성공단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개성공단에서 잘되면 핵 등 다른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다른 정부 고위 소식통은 "우리는 개성공단 문제도 풀어야 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적극 추진하는 입장"이라면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세계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반발 앞선 것"이라고 말했음.
- 한미 양국의 이런 차이를 대북 대화에 대한 온도차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음. 나아가 한미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이 회담이 끝난 지 7시간 뒤인 13일 새벽에 나온 것을 이유로 양국간 어느 정도 입장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됐음.
- 그러나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는 전혀 입장차가 없다"면서 "미국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나. 한·중 관계

- <“韓, 北에 대화 제의…주도적 역할 수행”>〈중국어학자〉(4/13,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잇따라 피력하면서 한반도 위기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해 중국 학자가 한국의 적극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한반도연수센터 교수는 13일 연합뉴스 전화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의 공동 형식으로 대화를 제의했다"며 "한반도 위기를 푸는 데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대응 방식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음.
 - 진 교수는 "한반도의 최대 위기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전과는 다른 대응 방식을 내놓았다"며 "특히 9·19 공동성명 이행을 언급한 것은 정확한 목표"라고 말했음.
 - 그는 "한미가 먼저 한발 물러난 만큼 이제는 북한이 한발 물러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한 길"이라며 "전형적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인 최근의 상황



속에서 북한은 도발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대내외적 목적을 거의 이뤘다"고 분석

- 진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먼저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먼저 물러난 쪽이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향후 중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 공조 방향을 두고 진 교수는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더욱 큰 압력을 가해서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바라고,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을 하고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주문하는 차이가 있었다"며 "미국이 대화를 들고 나온 만큼 양국 간 공통점이 생겼다"고 평가했음.
- 그는 미국과 중국이 지닌 한반도에 관한 전략적 이익이 다르지만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위기를 평화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같은 목적이 있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공동 해결을 통해 중국과 미국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고 지적

다. 한·일 관계

● <일본, 독도·센카쿠문제 전문가회의 설치>(4/12,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독도 등 영토문제 대응 전략 등을 수립할 전문가 회의를 설치. 아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영토문제담당상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토주권을 둘러싼 대내외 발신에 관한 유식자 간담회'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 아마토 영토 담당상은 "우리 영토를 단호히 지켜나간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기본방침에 입각, 외교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국제사회에의 (영유권 주장) 발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 전문가회의는 앞으로 독도와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국내외에 전파해 나가는 방책 등을 개발할 것으로 보임.
-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오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참의원 선거전인 7월초까지 관련 보고서를 낼 예정임.
- 전문가회의 좌장은 보수우익 성향의 국제정치학자인 니시히라 마사시(西原正) 평화안전보장연구소 이사장이 맡았으며, 멤버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연구에 앞장서온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다쿠쇼쿠(拓殖)대학 교수도 포함됐음.
- 한편,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독도와 센카쿠 등 영토 문제를 전담할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총리 직속으로 설치한 바 있음. 이 영토대책실은 앞으로 전문가회의가 개발한 영유권 주장 논리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내외 대응 전략을 만들어 실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라. 미·중 관계

● <미국, 중국發 해킹 양국관계 악화 경고>(4/10, 연합뉴스)

- 미국은 중국에서 유래한 해킹공격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



- 고 중국의 장기적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음. 미국의 로버트 호르매츠 국무부 차관은 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마중 인터넷 논단'에서 최근 양국 간에 벌어진 해킹 공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 호르매츠 차관은 중국을 거점으로 한 사이버 침입으로 민감한 정보가 도둑질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중국은 해킹에 대해 더욱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그는 "(해킹의) 출발지가 어디든 중국에서 유래된 사이버 침입행위를 막고 이를 조사하는 게 중국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측은 이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사이버 안전을 지키려면 더 많은 신뢰가 필요하다고 상호신뢰를 강조
 - 중국의 첸샤오첸 국가인터넷신식(정보)판공실 부주임은 "중국과 미국은 인터넷 산업 발전 촉진과 사이버안전 수호에 공동책임과 공동이익이 있다"며 사이버 안전을 위해 양국이 상호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 그는 "중국의 법은 모든 형태의 해킹을 금지하고 있다며 해킹을 막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며 변함없다"고 밝혔음. 미국은 최근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상대로 한 해킹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비난했음.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미국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을 향한 사이버 위협의 일부는 국가의 후원까지 받는 것이라며 중국을 공격하기도 했음.
 - 중국은 이런 미국의 비난에 대해 중국 역시 사이버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중 상당 부분이 미국에 주소를 둔 서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중국의 인터넷협회가 공동주최한 이 논단에는 양국 정부와 전문가, 인터넷 산업계 인사 230여 명이 참석했음.
- <중국 시진핑 등 케리와 회담…한반도 문제 협의>(4/13,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強) 총리,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 중국 지도부와 화동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음.
 - 이날 중국 새 지도부 출범과 미국 국무장관 교체 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은 케리 장관은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는 등 중국 지도부들과 한반도 상황 해결방안을 비롯한 이란문제, 시리아 등 중동 사태, 세계경제 회복 방안, 미·중관계 발전 방안 등 주요 현안을 협의했음.
 - 케리 장관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중국이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전했다. 케리 장관은 본격 회담이 시작되기 전 공개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에게 "지금의 한반도 문제, 이란 핵 문제, 시리아



- 문제, 경제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 하지만 시 주석은 공개 모두에서 케리 장관이 언급한 한반도나 이란, 시리아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양국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들어섰으며 이미 좋은 출발을 했다"고만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과 미국은 평등, 상호신뢰, 관용, 협력, 공동이익 등에 기초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케리 장관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2087호, 2094호 제재결의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이행하는 등 북한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케리 장관은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행동하고, 전쟁위협으로는 결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케리 장관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며 각 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시 주석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정국 조성에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관측됐다. 케리 장관은 시 주석과의 회동 후 이번 만남이 더할 나위 없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다며 한반도 문제해결 등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중일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케리 장관은 또 중난하이에서 리커창 총리를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케리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 리커창 총리는 이에 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관련국들이 모두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 리 총리는 또 경제 문제와 관련, "기업의 공정한 경쟁과 합법적인 권익 수호 방면에서 양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첨단기술 상품의 수출제한 해제를 위해 미국이 실제행동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 앞서 케리 장관과 왕이 부장과의 회동에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 왕 부장은 "중국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관련국들이 정세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해 관련국들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아울러 왕 부장은 한·미 외교장관이 12일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공개 피력한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적극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리 장관은 강한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2087호, 2094호 결의를 포함한 일련의 대북 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게 중국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음.

● <美·中, 사이버안보·기후변화 실무협약의진 구성 합의>(4/14,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안보 및 기후변화 관련 실무협약의진을 각각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 시간) 밝혔음. 그는 "우리 모두는 물론 모든 국가는 자국민, 자국의 권리와 사회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사이버 안보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음.
- 케리 장관은 "하늘의 비행기와 철길 위 기차, 댐을 관통하는 물의 흐름과 수송망, 전력, 금융거래에 이르기까지 사이버 안보는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우리는 사이버 기반을 향상시키기 위해 즉각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음.
- 지난 2월 중국군의 사이버 스파이 부대가 미국과 다른 외국 기업 등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했다는 의혹을 미국 컴퓨터 보안업체 맨디언트가 제기하자 양국은 서로 비난을 주고받는 등 최근 사이버 공격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음.
- 양국은 또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협력관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실무협약의진도 구성하기로 했음. 기후변화 실무협약의진은 오는 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중 연례 전략경제대화 이전에 구성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토드 스톤 기후특사와 중국의 세진화(解辰華)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이끌 예정. 기후변화 실무협약의진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기술, 관련 연구, 환경 보호 활동, 대체·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결정하게 됨.

마. 미·일 관계

● <"미국,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반대했다">(4/10, 연합뉴스)

-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작년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열도 국유화 조치에 반대했다고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밝혔음.
- 작년 9월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당시 대(對) 일본 외교의 실무를 맡았던 캠벨 전 차관보는 9일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유화 이전 자신이 일본 정부와 상담할 때 중국이 "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센카쿠 매입 계획의 철회를 "매우 강하게 충고했다"고 회고했음.
- 캠벨은 반대의 이유로 중국이 센카쿠 국유화를 일본의 일방적인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이자 '현상 변경 조치'로 간주,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고 소개했음. 그는 또 일본은 센카쿠 국유화를 향한 수속 와중에 "중국 측의 이해와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었다"면서 "일본은 당시 중국



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리(미국)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신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 성향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에 몸담고 있다가 지난 2009년 차관보로 발탁된 캠벨은 지난 2월 국무부를 떠나기 전까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보좌하며 한반도 문제와 중국 및 일본 문제 등에 깊이 관여했음.

● <"일본, 대북제재 강화 새 유엔결의 요구 방침">(4/11,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4~15일 도쿄를 방문하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때 북한 관련 정세에 따라서는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새 결의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요구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음.
- 케리 장관은 14일 기시다 외상, 1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각각 회담할 예정임. 미일 외무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의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금융제재를 통해 대북 압력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 앞서 두 사람은 이날 새벽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미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음.

● <미국, 일본 TPP 교섭 참가 수용>(4/12,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12일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참가를 수용했음. 이에 따라 일본의 TPP 참여는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됐음. 의회가 90일 안에 이를 승인하면 일본은 7월께 협상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전망
- 미국과 일본은 TPP 참가를 놓고 쟁점 사안에 관한 합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날 사전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두 나라는 우선 농산물 등 쌍방의 민감 품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양자간 합의문에 명기하기로 했음.
- 이런 전제아래 양국은 일본이 보호하길 원하는 농산물 분야에서 일본 측을 "배려"키로 하는 한편 미국의 희망대로 승용차와 트럭 관세는 즉각 폐지하지 않는다는데 뜻을 같이했음.
- 더불어 일본 보험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보장 차원에서 정부 지분이 100%인 일본우정(한국의 우체국과 유사)의 자회사인 간포생명보험이 새 상품 출시를 보류하기로 했음.
- 이미 간포생명보험은 미국 기업인 아메리칸패밀리생명보험이 약 70%를 차지하는 일본 압보험 시장에 진출하려 했다가 미국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유보한 적이 있었음. 그 후 압보험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간포 측이 학자금 보험 등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려 하자 미국은 다시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음.
- 양국은 또 농축산물 검역제도에서 각국의 주체성을 인정키로 했으며 안



전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입자동차 특별취급제도의 적용 대수를 확대하기로 했음.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상은 곧 양국 간에 합의된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임.

- 미국과의 협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캐나다와 호주 등 남은 참가국과의 사전 협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일본이 TPP 교섭에 참여하려면 기존의 11개 교섭 참가국 전체의 승인을 얻어야 함. 지금까지 브루나이와 칠레 등 7개국에 승인했고, 오늘 미국까지 수용함에 따라 캐나다와 호주 등 3개국만 남게 됐음.

바. 미·러 관계

● <러시아 "한반도 위기 군사력 증강 기회 이용 반대">(4/9, 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를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 증강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미국을 견제하고 나섰다.
- 알렉산드르 루카세비치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행동을 동북아 지역에 군사력을 대규모로 증강시키고 이곳에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전개하는 등의 기회로 이용하는 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 지역 주둔 전력을 늘리고 한국에 MD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으로 해석됐음. 루카세비치는 이 같은 행동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조성된 위기를 중화시키려는 노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러시아는 이에 앞서서도 외무부 성명 등을 통해 비슷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음.
- 10~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인터뷰에 응한 루카세비치는 "러시아는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사도발적 노선을 용납할 수 없다는 G8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며 "다만 어떤 경우에도 정치외교적 노력을 포기해선 안된다"고 강조
- 그는 정치외교적 노력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할 때 동북아 지역에는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음.

● <미-러, 인권침해 '블랙리스트 전쟁'>(4/13, 연합뉴스)

- 미국이 인권침해 혐의로 제재를 받을 러시아인 명단을 발표한 데 대해 러시아가 즉각 맞대응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마그니츠키법'으로 불리는 대(對) 러시아 인권법에 따라 인권침해 혐의로 금융 제재와 비자 발급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러시아인 1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 미국의 명단 발표에 러시아 외무부는 이튿날 곧바로 역시 자국 입국 금지 등의 제재 대상이 될 미국인 18명의 명단과 함께 논평을 발표했다. 외무부는 논평에서 "러시아 혐오증이 있는 미국 의원들의 압력에 밀려



- 러-미 양국 관계와 신뢰에 큰 타격이 가해졌다"며 "우리는 내정에 대한 간섭이기도 한 이 같은 조치를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음.
- 이어 "블랙리스트 전쟁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노골적 협박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정치인들은 러시아 같은 나라와 혼계나 공개적 강요 등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은 전망이 없다는 점을 인식할 때"라고 꼬집었음.
 - 그러면서 멋대로 작성된 미국의 명단과는 달리 러시아의 미국인 제재 명단에는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과 장기 억류를 합법화 하는데 가담한 인사들과 제3국에서 러시아인 체포와 납치, 살해 기도 등에 참여한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이날 러시아 외무부가 발표한 명단에는 전(前) 관타나모 수용소 관할 공군기지 사령관 등 수용소 관련자 4명과 러시아인 인권 침해에 가담한 미국인 검사, 판사 등 14명이 들어갔다. 러시아 당국은 이들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
 - 앞서 발표된 미국의 러시아인 제재 대상 명단에는 지난 2009년 모스크바 구치소에서 숨진 러시아인 인권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사망 사건에 연관된 인물 16명이 포함됐음.
 - 이들은 마그니츠키 변호사 조사와 재판에 참여했던 판사, 법무부, 검찰, 경찰, 구치소, 세무서 등의 중간급 간부와 직원들이었음. 나머지 2명은 지난 2004년 총에 맞아 숨진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 러시아어판 편집장 폴 흘레브니코프 사망 사건 관련자와 인권 침해로 악명높은 친(親) 크렘린계 체첸 정부 수장 람잔 카디로프의 경호원 피살 사건 연루자임.
 - 미국 정부는 이들에게 입국 비자 발급 금지와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몰수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음. 미-러 간 인권법 갈등은 지난해 말 불거졌음. 미국이 먼저 지난해 12월 중순 마그니츠키 변호사 사망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대러 인권법 '마그니츠키법'을 채택했음.
 - 영국 투자펀드 허미티지캐피털의 모스크바 사무소에서 일한 러시아인 변호사 마그니츠키는 2008년부터 자국 검찰과 경찰, 판사, 세관원 등 고위공무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비리사건을 파헤치다 탈세 방조 혐의로 기소돼 조사를 받던 중 2009년 11월 모스크바 구치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음.
 - 러시아는 마그니츠키법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미(對美) 인권법을 채택. 이 법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거나 러시아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았음. 러시아는 이 법에 따라 올해부터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전면 금지.
 - 이번에 발표된 양국의 제재 대상자 명단은 지난해 채택된 인권법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러 간 '블랙리스트 전쟁'으로 미국의 유럽 미사일방어(MD) 구축 계획 등으로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는 양국 관계가 더 냉각될 것을 우려



사. 중·일 관계

● <중국 해감선 센카쿠 일본측 영해 진입>(4/9, 연합뉴스)

- 중국 해양감시선(해감선) 3척이 일본측이 주장하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해에 진입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9일 보도했음.
-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하이젠(海監) 26호, 하이젠 50호, 하이젠 66호가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센카쿠 12해리 해역에 잇달아 진입했음. 중국 감시선의 12해리 해역 진입은 지난 1일 이후 8일 만임.
- 앞서 중국 군사사이트인 전침망은 하이젠 50호 등 중국 해양감시선이 8일 센카쿠 접속수역(12~24해리)을 순항했다고 전했음. 특히, 하이젠 50호는 중국어로 일본 경비함에 "중국 선박들은 중국 관할 해역을 순항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지난 3월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가해양국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한 이후 센카쿠 해역을 일상적으로 순항하면서 일본에 대해 주권 시위를 벌이고 있음. 해양국의 류츠구이(劉賜貴) 국장은 지난 1일 센카쿠 순항을 상시화하고 서해(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순항 및 법 집행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음.
- 중국은 배수량 5천418t, 길이 128m 규모의 최대·최신예 해상순시선 '하이순(海巡) 01'호를 조만간 센카쿠 순시 임무에 투입하는 등 일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예정임. '하이순 01'호는 지난 7일 상하이에서 최종 시험 항해를 마쳤으며 오는 16일 첫 해양 순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대만, 센카쿠 공동관리수역 합의">(4/10, 연합뉴스)

- 일본과 대만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해역에서의 어업 협정에 대략적으로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음. 아사히에 따르면 양국은 센카쿠 주변의 공동관리수역 획정 방안에 합의를 이뤘음. 센카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 어선이 공동관리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인정하되, 영해로 주장하는 섬 주변 12해리 이내 해역의 출입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음.
- 양측은 또 쌍방 어선 수 등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관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음. 대만 외교부도 양국이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타이베이에서 제17차 어업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센카쿠 주변 어업권 관련 협정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양국 간 어업회담은 2009년 2월 이후 4년 2개월여 만에 공식 재개되는 것임.
- 양국은 앞서 어업회담 의제 설정과 사전 조율을 위한 2차례 예비회담과 비공식 회담을 잇따라 개최했음. 일본 입장에서 이번 합의는 영유권 분쟁의 주된 상대인 중국이 대만과 대일(對日) 연대 전선을 펴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
- 한편,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음.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일본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신중하고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경



고했음. 일본과 대만은 센카쿠 해역에서 각자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까닭에 어업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음.

- 일본이 작년 8월11일 센카쿠를 국유화하자 대만은 영토 주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달 25일 경비선과 어선을 센카쿠 해역에 보내 해상 시위를 벌였음. 이후 일본은 센카쿠 문제에서 중국과 대만의 공조를 막기 위해 2009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대만과의 센카쿠 어업권 협상을 서둘러 재개했음.

● <“일본 항공자위대, 작년 800차례 긴급출동”>(4/12, 연합뉴스)

- 중국 전투기 등이 작년 일본 영공에 근접 비행한 회수가 250차례를 넘었으며 이에 맞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도 약 800차례 긴급출동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2일 보도했음.
- 중국 전투기 J10, 정보수집기 Y8 등의 근접 비행은 작년 9월 일본이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국유화한 이후 급증했음. 일본은 중국의 영공침범에 대비하기 위해 오키나와(沖繩) 나하(那覇) 기지의 F15 전투기 외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조기경계기(E2C)까지 긴급발진했음.
- 일본 측의 작년 긴급출동 회수는 냉전 종결 이후 가장 많은 것. 재작년 중국측의 일본 영공 근접 비행은 156차례였음.
- 특히, AWACS와 E2C는 통상 러시아군 비행기의 '일본일주 비행' 등을 감시할 때 투입되기 때문에 연간 출동회수가 20회 정도 밖에 안 되나 작년 9월 이후에는 AWACS와 E2C의 출동회수만 약 250차례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 <日-베트남, 중에 맞서 내달 해상협력 강화 회담>(4/14, 연합뉴스)

- 일본과 베트남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맞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하노이에서 해상안보회담을 열기로 했음. 일본 정부 관계자는 14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 양국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상대 입장을 확인하고 해상 안보를 위해 국제법을 따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 또 일본 측이 베트남에 해양 경비정 제공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은 그동안 자국의 해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이 경비정을 제공해줬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해왔음.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은 베트남을 "공동의 이익을 가진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며 외무성 고위관계자가 회담에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감시선이 일본 영해에 수차례 진입하는 등 분쟁을 겪어왔음. 베트남도 파라셀군도(베트남명 호양사·중국명 시사군도)와 스프래틀리 제도(쯔잉사·난사군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수년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음.



아. 기 타

● <미재무부, 한중일에 환율 관련 경고>(4/13, 월스트리트저널)

- 일본 신임정부가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정부가 일본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엔화가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음. 12일(금요일) 발표된 글로벌 환율 반기보고서에서 미재무부는 중국이 위안화가치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시장에 대대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우려를 표명. 그러나 재무부는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하지 않았음.
- 이번 보고서는 아베 신조 총리 하에서 급격히 선화한 일본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미국의 광범위한 대응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보임. 보고서 발표 몇 시간 전 백악관은 일본기업과의 경쟁강화를 우려하는 자동차산업 등 국내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태평양 자유무역지대 창설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일본 측 요청을 수락했음. 미정부는 일본의 경제개혁을 환영하면서도 일본이 과거에 구사하던 무역조작전략을 다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 지난주 일본은행이 국제 및 자산매입 확충을 통해 통화공급량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엔화 가치가 급락했음. 그때 이래 달러는 엔화 대비 약 7%, 아베 총리가 취임한 12월26일 이래 15% 상승했음. 외국정부의 환율 관련 항의와 경고에 대해 최근 일본정부는 엔화 가치 급락이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아니라 경기부양책의 부산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 금요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리는 "특정 환율을 겨냥한 통화정책을 추구할 생각이 없다"면서 일본은행 정책이 침체된 국내경제를 회복시키면서 글로벌경제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낮춰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해있음. 미국과 유럽, 일본 중앙은행이 환율에 영향을 주는 통화완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음. 고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선진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응해 자금을 신흥시장에 투입하면서 이들 국가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임.
- 미정부는 일본 경제정책이 엔화 가치 하락이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일본 경제정책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음. 아베 총리가 공격적인 정책을 시행한 이래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4년래 최저치에 가깝게 떨어졌음.
- 미재무부 보고서는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나 경쟁력 향상의 목적으로 특정 환율을 겨냥하지 못하도록 일본에 계속 압력을 가할 예정"이라 밝혔다. 보고서 발표 이후 거래량이 적은 금요일 오후 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달러 가치는 이번 주 최저수준인 98.08엔까지 하락했음.
- 지난 수 년 간 일본이 충분한 경기부양 조치를 동원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온 미 정부는 의도적인 엔화 평가절하에 대해 우려하면



- 서도 최근의 일본 경기부양책을 장려하고 있음.
- 한편, 지난 몇 년 간 공화당 및 민주당 정권 하에서 재무부는 중국을 공식적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행보를 보였음. 정부관계자들은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위안화 평가절상을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럼에도 중국정부 환율문제는 양국 간 경제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담화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지난해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는 위안화에 대해 자주 언급했으며 롬니 후보는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음.
 - 금요일 미국 제조기업 일부는 정부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규탄했음. 로비단체인 미국기업산업협회는 "재무부가 이번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경제회복과 제조업에 대한 크나큰 위협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난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